

<포럼 발제문>

우리 대학의 교육발전을 둘러싼 세 가지 의문

양난주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발제를 시작하며,

유감스럽게도 나는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에 대한 특별한 주장도 없고, 이 분야에 대해 별도의 연구를 한 사람도 아니다. 다만 교수라는 전문가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동료 전문가집단의 존재이기에 설사 현재 “교육발전에 대한 의문” 단계인 “생각”도 발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수회의 요청에 이렇게 무모하게 응한 배경에는 교수회는 무조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이 한 몫 하기도 했다.

■ 첫 번째 의문 - 대학을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일까?

대학의 목적은 학문과 지식을 발전시키고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직업인/시민 양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교수의 역할은 사회변화에 부응하고 또는 이를 선도할 지식을 생산하고 이에 기반하여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다. 연구와 교육의 쇄신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연구하지 않는 교수가 좋은 교육 내용을 생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연구와 교육은 각각 고유한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연구를 위해 교수가 별도의 노력을 하는 만큼이나 좋은 교육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 우리 대학에서 학문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일까? 개개인들이 하는 연구의 의미나 가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자신의 기능으로 역점을 두는 활동 차원에서 묻는 것이다. 대학의 연구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대학원과 연구소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대학차원에서도 이를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나는 우리 대학의 대학원 정책, 그리고 연구소에 대한 지원 등을 보면 우리 대학은 ‘연구기능을 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포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연구는 교수 개개인의 영역으로 맡겨놓았다는 생각이 든다.

-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대학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대학의 대학원은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기관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대학은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동안의 경험에서 종종 나는 우리 대학에서 대학원이 교수들이 원해서 개설해주는 기관이라는 인상을 받곤 한다. 이런 느낌이 들때 자괴감을 느낀다. 한 대학의 대학원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또 지속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학은 ‘교육중심 대학’ 인가?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대학원이 없는 대학? 교수의 책임시수가 높은 대학? 교양과목을 더 많이 가르치는 대학? 교육에 더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대학이라는 것과 교육중심 대학이라는 것은 다른 말인가, 같은 말인가? 설사 교육 중심 대학이라면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은 연구 없이 이루어지는가?

■ 두번째 의문 - 사립대학의 존재조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대학교육을 사적(私的)인 성격의 재화로 간주하는가, 공적(公的)으로 간주하는가는 특정 사회에서 대학교육을 제도화하고 있는 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도 대학교육을 완전히 개인이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시장상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한 사회정책의 범주 안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대학교육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의료 등 다른 사회서비스가 그렇듯이 상당부분 민간참여로 생산되고 있다. 즉 정부는 일부만을 직접 공급(국공립)하고 나머지는 비영리 법인이라는 자격을 갖춘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대해왔다. 이들 민간에 대해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교육에서 재정방식은 이용자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따라서 학생은 교육기관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사립대학들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ACE, CK, BK, LINK 사업 등)으로 이루어진다. 규제는 대학평가가 있으며 이 결과 역시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데 쓰인다.

한국에서 사립대학이 위치한 맥락은 철저히 규제된 시장(regulated market)이다. 사립대학은 시장 안에서 소비자(학생과 학부모)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입학자원 확보 경쟁)과 교육부의 규제를 준수하고 정책방향에 호응하여 재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 매진한다. 존립을 위해 자원을 확보하는 두 가지 불가피한 경로인 셈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교육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애시당초 민간 주체가 사립대학으로 고등교육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자신이 고유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적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간주된다. 그리고 그 민간 주체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이 교육사업의 공익적 성격 때문에 정부는 조세와 보조금으로 사회적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립대학에게는 “고유한 교육적 사명”과 “교육이라는 목적사업”이 존재 이유이다. 사립대학은 자신의 고유한 사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다른 교육과의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고 가정된다.

- 우리 대학은 고유한 교육적 사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대학의 법인은 대학발전의 주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또 할 수 있는가? 법인이 할 수 없다면 우리 대학에서 이러한 사명을 책임있게 추진할 주체는 누구인가? 이사회인가? 평의회인가? 본부인가?

- 정부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수행해온 각종 교육혁신사업은 우리 대학의 사명에 얼마나 부응하는가? 이 사업들을 통해 우리 대학의 교육적 역량은 향상되고 있는가? 이들 사업의 방향은 교육주체들의 민주적 논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인가?

- 아니, 설사, 사립대학에서 의지를 갖고 교육혁신을 추진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서 개별 사립대학이 행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고유성과 재량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되는가?

■ 세 번째 질문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이론에 근거한 답이 이미 있고, 개인의 경험치에 근거한 잠정적인 답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일치한다.

먼저 일반이론에 의한 설명은 간단하다. 교육자의 역량과 질, 그리고 피교육자의 동기(이 역시 부분적으로 교육자의 역량에 의해 달라진다)와 규모다. 교육은 공급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며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휴먼서비스다. 좋은 교육적 결과는 공급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교육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상이하다. 교육은 개별적이며 관계적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교육의 효과성은 학생의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 즉 소규모단위일 때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으로 좋은 교육적 결과는 전문가주의 모형에 의해 설명되었다. 전문가(교수)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학생들보다 더 잘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은 교육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주의 모형이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창의적으로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학생보다 학생들의 필요를 더 잘 알기는 커녕, 자기이해에 기반하여 행동하는 현실이 발견되면서 이 모형의 적합성은 희박해졌다.

그 다음 모형은 성과관리다. 전문가를 비롯한 공급자들이 좋은 결과를 위해 행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수행과제를 표준화하고 업무를 할당하며 각종 평가, 지표 관리를 통해 교육적 행위를 통제/유인하는 것이다. 지금 교육현장에서 대단히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식이다. 이는 표준적인 수준에도 미달하는 전문가들에게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장기적이고 창의적인 목표를 위한 내적 활동을 추동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사실, 이 모형은 행위자를 재량권을 가진 전문가로 인정

하지 않고 표준화된 관리자로 전제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주의 모형이 있다. 학생들이 오지 않는 학교는 문을 닫고, 학생들이 오지 않는 학과는 없애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전공은 무제한 신청자를 받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강좌는 무제한 수강허가를 하여 선택받는 것만으로 교육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소비자주의 모형에서 선택은 교육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공급자를 소비자의 필요에 귀기울이게 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휴먼서비스(하물며 교육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소비자의 필요와 일치하는가, 선택지들이 등가물인가(냉장고 비교구매와는 다르게), 선택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가 실제 특성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가 등 ‘선택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지적된다.

- 우리 대학에서 수업에 학생참여를 높이고, 역동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방안은 주로 하향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플립드러닝, 캡스톤 교과목 등이 장려되고 때론 할당된다. 새로운 시도가 외적 자극으로 주어지는 것은 일정정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플립드러닝이 아니어도, 캡스톤디자인이 아니어도 학생들이 수업에 문제를 가지고 참가하게 하기 위한 노력, 토론과 창의적인 과제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상의 방법이 수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대학행정이 필요하다. 우리의 대학행정이 새로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지 의문이다.

- 나는 융복합전공이 활성화되기 위해 먼저 두 가지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개별 전공이 배타적인 고유성을 가질 것, 다른 하나는 융합을 위한 교수의 연계활동과 공동연구가 장려될 것이 그것이다. 이미 융복합인 학과가 적지 않다. 생면부지의 교수들에게 연락이 온다. 융복합과정을 만들자고. 나는 이러한 상황이 과연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고 발전하기 위한 노력의 방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공법. 교수가 교육할 지식을 연구하며 학생들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규모를 맡아 가르치는 것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고등학교 때보다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들어찬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발전시키고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어찌 가능할까? 비교과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정도(正道)를 걷는 것일까?